

21세기 가족부양 기능변화와 지역사회 노인부양 대책

이 선 자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한국은 과거 수십년 동안에 산업화·도시화 과정을 겪으면서 사회적 변화가 많았다. 사회적 변화 중에서 가장 현저히 나타난 변화 현상이 출산률과 사망률의 저하로 인한 인구변화(Demographic transition)로 인구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었다. 노인인구의 비율은 1997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수가 전체인구의 6.3%, 2000년에는 7.1%, 2020년에는 13.2%로 증가될 전망이다(통계청, 1997). 앞으로 인구의 고령화·장수화의 진전에 따라 후기 고령노인의 증가가 예상되고 와병노인이나 치매노인 등 타인의 간병이 필요한 노인의 증가가 동시에 예상된다.

그러나 가족제도에서는 가족구조의 핵가족화와 가족의 노인부양 의식의 약화 등 전통적 노인부양체계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서 앞으로 21C를 준비하는 시점에서 가족생활의 대책은 물론 나아가 지역사회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1. 결 론

21C 가족제도의 변화는 노인부양 책임을 지역사회가 담당하여야 하는 것으로 예측된다.

지역사회의 대책으로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거나 노인단체가 주체가 되어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급증하는 노인인구의 복지욕구에 반하여 노인복지 시설수는 부족하게 될 것이고, 이에 대한 대비로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한 복지사회의 Community Care 계획이 요구된다.

앞으로 검토되어야 할 대안으로서 가정보건서비스, 노인영양센터, 치매노인서비스, 무료진료서비스, 간병서비스, 건강검진서비스, 가사지원서비스, 잡무지원서비스, 전화확인서비스, 가족휴식서비스, 우호방문서비스, 상담서비스, 음식 및 반찬배달서비스, 위기통보제도, 여가활동 및 휴식보호제도, 교통편의 제공, 정보제공, 가옥수리, 법률상담, 노인학대 방지 및 신고센터, 취업알선서비스, 노인취미교실 및 평생교육 지원사업 등 노

인의 다양한 욕구에 대비한 서비스의 다양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2. 지역사회 복지사업의 발전방안

노인을 위한 지역사회 복지사업을 발전시키는 방안에는 중앙정부에서 노인복지 정책의 수립과 법률제정 등의 거시적 방안이 있겠으며,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는 지역의 실정에 맞는 지역사회 노인복지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노인을 위한 복지사업이 자치단체에 의해 수립된다면 노인 자신에 의한 활동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즉 노인회의 조직으로 노인의 사회 봉사활동 및 권익보호운동 전개가 있을 수 있다. 최근 대한노인회 활동과 노인복지 시설협회, 노인유권자 연맹, 노인의 전화 등 노인단체가 활동을 활발히 하면서 중앙정부의 정책개발을 촉구하거나 노인복지법 개정 등을 촉구하면서 이익집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1996년도에 노인복지 욕구조사를 실시하여 1997년 7월에 그 결과를 발표하고 앞으로 시민복지 5개년 계획을 수립중에 있다. 즉 주민의 복지욕구나 수요에 기초한 행정계획을 추진하게 되었다. 지방의 경우도 지방자치제도 이후에 각 시·도의 실정에 맞는 복지사업계획이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많은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갖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가 실시한 노인복지 욕구조사 결과는 노후생활보장을 원하는 것이 44.9%로 가장 높았고, 노인복지시설 확대 22.5%, 의료서비스 개선 21.5%, 취업기회 확대 6.6%, 여가활동 프로그램 개선 2.5%, 기타 2%였다(서울시청개발연구원, “사회복지정책 토론회” 자료. 1997. 6).